

비주류, 새누리당 장악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

“국민을 위한 소신에 따라 투표” 막판 친박 27명 판세 갈랐다

찬성 234명, 숫자의 의미

‘재석 299명 중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

9일 오후 4시10분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찬반 투표 결과는 향후 정국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여야 의원들의 운명 뿐만 아니라 ‘탄핵 정국’ 대선 정국을 둘러싼 야권의 주도권 다툼도 운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투표에서 가결의 열쇠를 쥔 새누리당의 ‘숨은 탄핵파’가 대거 찬성표를 이탈하면서 탄핵안은 가볍게 의결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야권의 172표와 여당 비주

류의 35표 외에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에서 27표가 찬성 쪽으로 이탈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128명의 여당 의원 중 절반 가까운 6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이날 투표 결과는 “사사로운 관계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역사적 판단을 해달라”는 김관용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제안설명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단장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찬성표가) 220명이 넘으면 비박(비박근혜)계뿐 아니라 친박도 상당수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 지형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권은 220표 이상을 확보하는 게 최종 목표였다. 막판까지 표 계산이 치열하게 벌

어진 이번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면서 향후 새누리당의 붕괴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던 친박 일부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친박은 사실상 ‘폐족’의 행보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새누리당 해체와 새로운 보수정당 재창당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비박계의 어깨에는 힘이 실리게 된다.

무엇보다 차기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내년 5·6월로 예상되는 대선을 앞두고 가벼운 발걸음을 떼게 됐다. 탄핵안 통과를 문 전 대표의 대선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표결 직전 다양한 경로로 예측해 본 여당 의원들의 찬성표는 195~230표였다. 여당 비주류인 비박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최대 210표로 가까스로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 전망치를 내었다. 일부 의원들은 이보다 10~20표 + α를 점쳤다. 무소속을 포함한 야권 표를 모두 합해도 찬성표는 최대 172표였다. 가결 정족수인 200표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여당 의원 2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은 33명뿐이었다. 비상시국위는 친박 의원 중 숨은 탄핵 찬성파가 10명 안팎이라 추산했다.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막판까지 고심하거나 눈치를 본 의원들은 50명이 넘었다. 특히 83명의 초·재선 의원들은 가장 큰 변수였다. 대다수가 지난 4·13 총선에서 친박의 입김에 따라 공천을 받았다. 이들은

“소신에 따라 투표하겠다”고 밝혔으나 친박 지도부의 눈치를 보며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못했다.

이 같은 여당 부동층 의원들이 이날 표결 결과에서 이변을 연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계는 막판까지 설득 작업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이 꺼려하던 탄핵안의 ‘세월호 7시간’ 대목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야당은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결 정족수를 조금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며 “(여당) 초·재선 의원들이 83명의 초·재선 의원들은 가장 큰 변수였다. 대다수가 지난 4·13 총선에서 친박의 입김에 따라 공천을 받았다. 이들은

제한한 ‘투표 인증샷’은 이탈표를 방지하는 집 단속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 38명 전원과 일부 민주당·새누리당 비박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판세가 달라졌다. 촛불 민심에 따른 ‘탄핵 후폭풍’을 염려한 상당수 의원들이 비박용으로 인증샷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탄핵에 찬성하면서 의사를 밝히지 않던 ‘숨은 탄핵파’가 가세하면 향후 경제 개혁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 찬성이 ‘배신’으로 비치는 게 부담스러웠던 일부 여당 의원들이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은 새누리당이 살아남고 그들의 정치 생명 연장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기자 sdoh@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위해 입장하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달하는 탄핵찬성 촉구 꽃다발을 뿌리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들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꽃 뿌리친 이정현, 투표도 안한 최경환

표결 이모저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9일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여야 의원들의 표정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탄핵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침울한 분위기였다. 염동열 의원은 본회의장 입장에 앞서 기자와 만나 “침울하고 착잡하고 가슴이 아프다”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대표 친박(친박근혜)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유일하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지만 발언대에 서지 못했다. 국회 측은 “여야 합의가 없어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은 하지 못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최경환 의원은 비롯해 일부 친박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잠시 떠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의 얼굴에는 탄핵 가결을 위한 의지와 단호함이 묻어났다. 더불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룸에서

농성을 벌였고, 로텐더룸 한쪽에서는 의원들의 릴레이 탄핵버스기도 진행하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던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의 강한 명령이 없었으면 (탄핵안이) 발의가 됐겠느냐”며 “오늘 압도적인 의결은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탄핵 장미꽃’을 한 송이씩 들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탄핵안 찬성 표결을 당부하기도 했다.

본회의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여야 의원들은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를 보였다. 민주당은 본회의 앞서 2시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안 표결 시 웃음과 잡담, 환호 등을 자제하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 열린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장면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켜봤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본회의의 방청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했고 각 정당 의석 비율에 따라 방청권 40석을 할

당받은 민주당이 전원 세월호 유가족에게 제공했다.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본회의장 입장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단순히 대통령 쫓아내는 탄핵의 의미를 넘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기 시작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유족은 “탄핵이 부결된다면 국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방청권은 새누리당이 43석, 민주당이 40석, 국민의당이 13석, 정의당이 5석, 무소속이 5석 등을 배정받았다. 국민의당은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백남기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 측에 방청권을 위임했다. 정의당은 소속 국회의원 6명 중 양보 의사를 밝힌 윤소하 의원을 제외한 5명의 의원실별로 일반 시민을 초청했다. 새누리당은 원내행정국을 통해 방청석을 요청한 의원실에 각각 1석

씩 선착순으로 배정했다.

긴장감은 국회 안만큼 국회 밖도 높았다. 국회 정문 출입구는 평소와는 달리 철문을 절반 이상 닫고 한두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겼다. 이 문으로 출입하는 공무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들은 출입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날 국회 출입문 9개 중 복문·서문·헌정·도서관 정문·경비대 정문 등 5개문이 폐문됐다. 또 경찰차량 460여대와 경찰 지원중대 1만여명이 국회 안팎에서 대기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국회 인근에서는 오전부터 탄핵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집회가 이어졌다. 국회 정문에서는 정의당 당원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밤세 연호 농성을 하며 탄핵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여의도로 진입을 시도한 트랙터를 모두 차단하고 나서기도 했다.

성기호·김보경 기자 kihoyeo@

유일호 경제팀 유지할듯

경제사령탑 어떻게 되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되면서 경제팀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에 준하는 비상 대응 체제로 돌입했다. 경제 사령탑은 사실상 경질됐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분간 계속 맡을 여지가 많다. 경제 정책 과제보다 혼란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세계 국가 경제를 이끌고 갈 계획인 경제 정책 방향을 짜고 있는 기재부는 일단 일손을 시장 불안감 진화, 대외 신인도 관리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여차피 경제 정책 방향을 이날 말 발표해 봤자 내년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지난달 초 제시됐던 ‘임종룡 선임 부총리’ 카드는 현재 분위기에 맞지 않아 무기가 기울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경제팀 수정안이라도 교체하는 등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없진 않다”면서도 “국민 여론이나 법적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볼 때는 황 총리 운신의 폭이 좁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내에서도 유 부총리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 보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지난달 2일 선임 부총리 내정 이후 반황에 따라 6개월 이상 더 자리를 지켜야 할 처지다. 앞으로 총리(대통령 권한대행)와 각 정부 부처 장관은 자리를 지키며 국정 공백 수습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이 소요된다.

한계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헌법에 따라 6개월 내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 한계가 6개월을 모두 소화한 뒤 박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내년 8월께야 대통령이 선출된다. 신임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취임해 총리와 각 부처 장관을 임명하고, 이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같이 지난한 과정을 거치려면 황 총리, 유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임기는 최대 내년 9월까지 갈 수도 있다. 유 부총리 입장에선 풀이된 마음을 추스르고 제2의 임기를 준비해야 하지만, 이를 보는 주위 시선은 밝지 않다. 최근 유 부총리는 현장 방문 등 외부 활동을 부쩍 줄이며 퇴임 수순을 밟고 있었다. 경제팀 실무자들의 업무 집중도와 속도도 부쩍 떨어졌다.

기재부는 “이미 2004년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처해 본 경험이 있기에 크게 중요하지 않는다”며 “당시 조치를 매뉴얼 삼아 개략적인 대응 계획은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경제 사령탑이던 부총리와 현 유일호 부총리는 처한 상황과 카리스마 등 모든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노 대통령 탄핵한 가결 때 고건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 부총리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경제 안정을 이끌었다. 이 부총리가 탄핵 가결 두 시간여 뒤 낸 성명에서 “책임지고 경제를 챙기겠다”고 밝힌 것은 지금까지 두고두고 회자된다. 반면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힘도 많이 빠져버린 황 권한대행·유 부총리가 격랑 속 대한민국(號)을 잘 이끌어갈지 경제 주체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다.

세종=오종택 기자 tal@